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20911 vol.90

무형문화유산의 전쟁 전북의 실태와 과제

Contents

1. 국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쟁과 급변하는 정책
2. 국가 경쟁에서 지자체 경쟁으로
3.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 전북의 추진과제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장 세 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동 영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9월 11일 vol.90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무형문화유산의 전쟁 : 전북의 실태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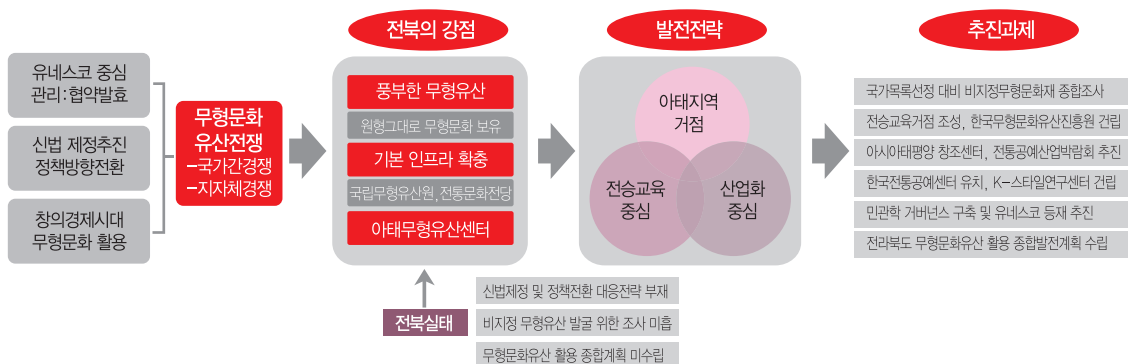
1. 국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쟁과 급변하는 정책
 - 1) 무형문화유산의 전쟁 : 경제논리와 내셔널리즘의 결합 4
 - 2) 유네스코 기준의 준용 및 전통문화 정책기조의 전환 6

2. 국가 경쟁에서 지자체 경쟁으로
 - 1) 무형문화유산 거점 위한 강원도의 노력 7
 - 2) 지자체 간 무한경쟁과 전라북도의 실태 8

3.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 전북의 추진과제
 - 1) 국가대표목록 선정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조사·연구 필요 10
 - 2) 무형문화유산 관련 시·도 역할분담 : 전북, 전승교육 및 산업 중심 11
 - 3)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화 전략 13
 - 4) 거버넌스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의 종합계획 수립 15

〈요 약〉

- ‘무형문화유산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함. 특히 우리나라는 강릉 단오제 등재 이후 중국과의 등재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쟁도 불거지고 있음
- 등재 경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가칭)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이 추진 중이며, 정책기조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중심에서 ‘활용’으로 달라지고 있음
- 환경변화를 선점하려는 지자체 경쟁 역시 치열함. 정책전환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한 강릉단오제를 참조해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발전전략으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인
- 하지만 전통문화의 본향이라고 자부하는 전라북도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정책전환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문화재청이 새 기준에 맞춰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발굴 중인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서 전라북도과 관련된 종목을 찾기가 어려움. 이에 반해 서울, 전남 지역과 관련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다수 포함돼 있음
-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전라북도를 무형문화유산의 아시아·태평양 허브이자 무형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시급함.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 **첫째**, 전라북도는 메카톤급 무형문화유산이 많으나 세계유산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목록 선정과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서서 전라북도는 무형문화유산 전승·교육의 중심이자 전통문화산업화의 거점이 되어야 함. 따라서 (가칭)무형문화유산법(안)에 포함돼 있는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도 전라북도에 건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유치된 전라북도는 무형문화유산의 아시아·태평양 허브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네스코 가입국이 참여하는 정기적 국제행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 (가칭)아시아태평양 창조센터와 아시아태평양 전통공예산업 박람회를 제안함
- **넷째**, 전통문화산업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적화가 필요함. 문화재청이 구상 중인 한국전통공예센터를 전라북도에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또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가칭)K-스타일 디자인센터의 건립을 제안함
- **다섯째**, 전라남도도 대학·지자체·전승단체가 공조체계를 구축, 낙안읍성·광주김치·법성포단오제 등을 조사·연구해 중요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후보에 올림.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 **끝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구 한스타일진흥원) 등을 활용해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수도로 조성하는 (가칭)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종합발전계획(학술연구용역)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1. 국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쟁과 급변하는 정책

1) 무형문화유산의 전쟁 : 경제논리와 내셔널리즘의 결합

창의경제 출현으로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주목

- 창의경제가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의 보전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 가치 고양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세계화하는 데 많은 노력 기울임
 - 예를 들어, 전통문화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약 26조 8천억원~33조 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2008년~2010년의 전통문화산업별 매출액 기준). 향후 5년간 전통문화산업 전체시장의 평균 증감율은 낙관적 전망 시 5.9%, 보수적 전망 시 1.4%가 될 것을 예상함¹⁾
-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알리게 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략(장소마케팅, 관광자원화, 문화상품화 등)이 활성화됨
 -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될 경우 해당 지역의 방문통행량이 세 배로 증가함
- 세계 각국이 자국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면서, 한편으로 유네스코 등재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내셔널리즘과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중·일 갈등

- 강릉단오제가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자 중국 내에서 '단오의 원조논쟁'이 불거졌고,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민족주의(Chinese nationalism)의 표출로서 혐한감정(嫌韓感情)이 불거짐
 -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시 중국유학생의 폭력사태, 그리고 급격히 팽창하는 중화주의에 대한 반발이 겹쳐지면서 반중감정(反中感情)이 격화됨
- 강릉단오제 갈등 이후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싼 한·중 두 나라의 경쟁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해짐
- 강릉단오제 등재로 자국 받은 중국은 2009년 중국단오제를 '용선축제'로 등재했으며, 2009년 '동의보감'이 등재됐을 때는 '중국침구'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 등재했음. 이에 반해, 중국이 2006년에 농악을 조선족의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등재하자 한국은 크게 반발했고, 최근 '풍물놀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추진 중임
- 한·일 간 경쟁도 불거질 기미를 보임. 한 예로, 일본은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한식 세계화'에 위기를 느낀 일본의 견제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함
 -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궁중음식' (2011년 등재 추진했으나 보류됨), '김치' 등의 등재를 추진 중임
 - NPO '일본 요리 아카데미'가 2011년 6월 초 교토부 지사에게 일본 요리의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2013년 등록을 목표로 추진 중임. 일본 내부에서 한국의 '조선궁중요리'의 유네스코 등재보류에 안도를 표하면서 "일본 전통음식의 독자성과 세계적 일식 붐을 감안할 때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²⁾

아리랑·가야금·씨름·판소리 등이 중국 무형문화유산?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 중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차에 걸쳐 모두 1,219종목을 비물질문화유산목록(무형문화유산의 중국대표목록)으로 선정했음³⁾

1) 문화체육관광부(2011),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방안 연구: 실태조사」참조

2) 和食のユネスコ世界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どうなる? (2012年2月8日 読売新聞)

3) www.ihchina.cn/inc/guojiaminglu.jsp 참조

- 그런데 2011년에 발표한 제3차 목록을 보면, 조선족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기예·잡기, 전통의약, 명절민속 등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범주화됐고, ‘아리랑’, ‘씨름’, ‘농악무’, ‘그네뛰기 및 널뛰기’, ‘전통혼례’ 등 16종목이 중국의 국가급 대표목록에 포함돼 있음
 - 이 중에서 ‘중국의’ 농악무는 이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음

〈표 1〉 중국 동북3성 조선족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등록현황

지역	문학	무용	곡예	기예잡기	전통음악	민간음악	민속	전통미술	전통기예	전통의약	민간신앙	계
길림성		2	1	2	2	1	4		1			13
요녕성		2	1				1					4
흑룡강성												
계		4	2	2	2	1	5		1			17

〈표 2〉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성급 비물질문화유산 등록현황

지역	문학	무용	곡예	기예잡기	전통음악	민간음악	민속	전통미술	전통기예	전통의약	민간신앙	계
길림성		12	2	6		4	7		10	1		42
요녕성	1	2				2	1					6
흑룡강성		6		1	2		3					12
계	1	20	2	7	2	6	11		10	1		60

〈표 3〉 한국 100대 민족문화상징⁴⁾과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비교

한국 :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국 :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한국 :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국 : 성급 비물질문화유산
풍물굿(농악)	朝鮮族農樂舞	탈춤	朝鮮族農樂
판소리	盤索里	윷놀이	舞朝鮮族遊茨游戏
아리랑	阿里郎	김치	朝鮮族泡菜
거문고	朝鮮族民族樂器製作技藝	떡	朝鮮族打糕制作技藝
대금	朝鮮族民族樂器製作技藝	된장	朝鮮族大醬
씨름	朝鮮族摔跤	초가집	朝鮮族尤茨
한복	朝鮮族服飾		

자료 : 이정원·공정배·김용범(2012),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로 비롯된 한중간 문화갈등 배경 연구 : 중국 조선족 문화의 이중정체성을 중심으로” 참조

- 위기감을 느낀 문화재청은 가치(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대표목록 선정을 위한 조사와 중요 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함
 -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창의경제의 논리와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싼 내셔널리즘이 한·중·일 3국의 ‘무형문화유산의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임

4)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2006년까지 전문가관과 국민여론조사 통해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했음

2) 유네스코 기준의 준용 및 전통문화 정책기조의 전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우리나라 지정기준 전환 필요

- 유네스코는 기존 제도를 종합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을 제정함(2003.10.17)
 -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 1993년 ‘인간문화재’ 제도, 1999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음
- 국가별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했으나 협약 발효(2006.4.20)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공동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발굴·관리되고 있음. 즉, 협약 집행기구인 ‘정부간 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역시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가 협약이행을 위해 개선할 점은 첫째, 국가목록 작성과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확대, 둘째, 전승공동체의 강조, 셋째, 긴급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임⁵⁾

활성화 계획부터 법 제정까지, 달라지고 있는 정부정책

- 문화재청은 국내의 전승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미래 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함
-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전수교육관 활성화’,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 확대’, ‘법적 기반 및 실행기구 마련’ 등 5개 핵심전략에 2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5년간(2013~2017) 4,459억 원을 투입함
- 또한, 문화재청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분리,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표 4〉 (가칭)무형문화유산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용어변경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전승단체 국가무형문화유산 시·도무형문화유산/이북5도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장 (제2조)	기능, 예능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유네스코 협약의 카테고리 한국적 수용
보전원칙 변경 (제3조)	원형유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무형≠원형
지정제도 추가 (제18조)	보유자(보유단체) 반드시 병행 지정	전승교수(전승단체) 없는 종목 지정 가능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제도 추가	아리랑, 김치 등
이수증 심사, 발급 주체 변경(제26조)	보유자(보유단체)	문화재청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	기량 강화

5) 문화재청·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2011),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연구」참조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전수교육 방법 추가(제30조)	도제식 전수교육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 (전수대학 선정, 재정지원 등)	시대적 변화 반영
전통공예품 인증제(제41조)	없음	전승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 국가 인증	시장신뢰성 증대
전통공예품 은행제(제43조)	없음	전통공예품 은행에서 체계적인 작품 구입, 수요기관 대여, 현지 전시 지원	공예품 수요증대
창업·제작·유통 지원(제44조)	없음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창업 지원 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지원 전통공예품 유통망 구축 지원 등	자생력 확대, 관광자원화
국제교류 지원 (제45조)	없음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공연, 전시 등) 지원 전통공예품 해외판로 개척 및 지원	해외선양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출(제51조)	없음	무형유산에 대한 국제특허출원 예방 전래된 기술체계 지식재산권 불인정 및 창조된 영역 지식재산권 인정	공유확대 창작의욕 고취
전승자 권리 보호 (제53조)	없음	지정무형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외에 제3자의 명칭 사칭 금지	전승질서 확립
무형유산법 집행기관 신설 (제46조)	문화재보호재단 일부기능 수행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법인) 신설 - 창업·제작·유통 지원 - 전통공예센터(전시·판매) 운영 - 새터민, 다문화가정, 해외입양인 대상 전통문화(국악) 교육기관 운영 - 전통공예품 인증, 은행제 운영 등	무형유산 진흥정책 집행기관

2. 국가 경쟁에서 지자체 경쟁으로

1) 무형문화유산 거점 위한 강원도의 노력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이후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

-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함. ‘아시아 단오 한마당’ 행사처럼, 중국, 일본, 북한, 인도네시아 등 단오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도시)의 참여를 통해 단오문화의 세계적 메카로 조성해가고 있음
- 강릉시가 주도한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과 강릉 ICCN세계무형문화축전은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강릉이 무형문화유산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무형문화유산 관련 국제화 전략과 ICCN

- ICCN은 강릉이 2004년 국제시장단회의, 2005년 국제워크숍에서 제안한 기구임. 2008년 이집트 국제시장단회의를 통해 정식 창설됐으며, 제4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당사국 총회(2012.6)에서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정식 승인받음
- ICCN은 21개국 29개 도시, 8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강릉시장이 대표이며 사무국도 강릉에 있음
- ‘ICCN세계무형문화축전’은 ICCN 회원국 간 순회 개최하며, 올해 강릉에서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23개국 29개 팀, 국내 32개팀이 참가할 예정임

2) 지자체 간 무한경쟁과 전라북도의 실태

제2의 강릉단오제를 꿈꾸며 유네스코 등재 경쟁에 뛰어든다

-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국 지자체에게 하나의 선례가 됐으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에 불을 붙임
- 2012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목록에 10건(잠정목록 14건), 기록유산 목록에 9건, 무형유산 목록에 14건을 등재시킴
- 등재유산과 관련된 지역을 살펴보면 세계유산(잠정목록 포함)은 전남이 6건(고인돌유적, 도요지, 공룡화석지, 염전,

〈표 5〉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12. 7. 20. 기준)

구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 1988년 우리나라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 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 2005년 우리나라 가입 • 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신청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기 : 매년 • 신청서류제출 : 매년 2.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기 : 매 2년마다 • 신청서류제출 : 격년 3.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기 : 매년 • 신청서류제출 : 매년 3.31까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 신청대상 선정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 자문기구평가 :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제출 익년 4월까지) • 최종심의 ·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매년 6~7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 신청 대상 공모 실시 • 신청 대상 선정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 평가 및 최종 심의 · 결정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 1차 평가 (12월~익년 2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 (제출 익년 4월~5월)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 신청대상 선정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 검토 및 평가 : 정기간위원회 등재심사 소위원회 (제출익년 1월~5월) • 최종심의 · 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정 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대한민국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건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5.12.9), 창덕궁, 화성(19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2000.12.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7.2) 조선왕릉(2009.6.30)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양동(201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19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2001.9.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례(2007.6.14) 동의보감(2009.7.31) 일성록, 5.18관련기록물(201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건 중요제례 및 중요제례악 (2001.5.18) 판소리(2003.11.7) 강릉단오제(20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9.30)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건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 · 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목록 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목록 제도 없음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2건(157개국) (문화745, 자연188, 복합29) -이탈리아 47건, 중국 43건, 일본 16건 ※위험 처한 유산 : 38건(30개국) ※공동등재 2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8건(96개국) -독일 12건, 오스트리아 12건, 러시아 11건, 폴란드 10건, 멕시코 9건, 중국 7건, 일본 1건 ※공동등재 1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건(86개국) -중국 29건, 일본 20건, 크로아티아 11건, 스페인 10건, 터키 9건, 프랑스 9건 ※공동등재 1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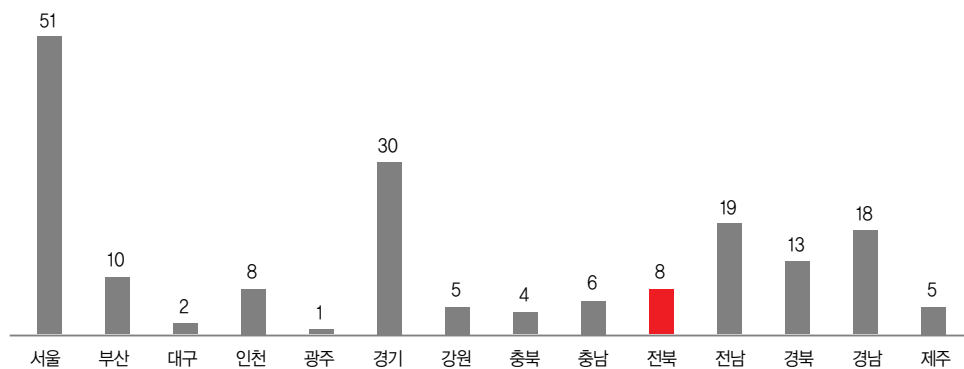
갯벌, 낙안읍성), 경북이 5건(석굴암·불국사, 해인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한국의서원), 경기도가 4건(화성, 고인돌유적, 조선왕릉,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등임

-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유산의 성격이 짙다고 하더라도, 강릉단오제(강원), 강강술래(전남),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서울), 남사당놀이(경기),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제주), 처용무(경북), 한산모시짜기(충남), 매사냥(전북, 충남)처럼 특정 지역과 관련된 유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음
- 특정 지역 유산이 유네스코에 다수 등재되면서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 특히 2012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국가별로 1개씩을 제한하면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아리랑’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했음. 하지만 2013년 이후 등재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2의 강릉단오제’를 꿈꾸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 제정 및 정책전환, 유네스코 등재 경쟁에도 대응전략이 없는 전라북도

- 유네스코 중심의 관리체계 및 등재를 위해 정책전환과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음. 전라북도는 여전히 현행법 내에서의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무형문화재 지정·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법 내에서의 개선방안임. 제정추진 중인 신법 및 전환되고 있는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은 아님
- 특히 비지정 무형문화재 대표목록 작성과 관련해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향후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등재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사례로, 지역 전문가들은 ‘진주대사습놀이’의 유네스코 등재를 제안했으나 관련기관 및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하나의 제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함
- 전라북도는 국립무형유산원(2013년 개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2013년 이전계획)가 들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거점지역임에도, 유네스코 등재와 무형문화정책 전환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우리나라 모든 곳이 무형문화를 공유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는 지역 편차가 큼. 즉 무형문화의 발굴, 보존, 활용은 지자체, 학계, 전문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짐

〈표 6〉 지역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2012. 6. 30 기준, (단위 : 명))



자료: 문화재청(2012),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참조

- 새로 선정될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도 민·관이 손을 잡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지역별 선정결과가 달라질 것임.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임

3.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 전북의 추진과제

1) 국가대표목록 선정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조사·연구 필요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발굴 중

-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준비 중인 신법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유산을 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름
- 현행법에 의한 무형문화재 정책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항목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원형성·수월성·고급성에 집중함. 이에 반해, 신법에서는 살아있는 문화, 전승성이 강한 무형문화유산 발굴에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연구’ 및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수조사’를 진행 중임
 - 전자는 한국민속학회가 용역을 받아서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후자는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음

2011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연구'에 수록된 후보목록 중 전북지역 무형문화유산으로 고려될 수 있는 목록 회박

-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임
 - 선정 기준은 국가나 시, 도의 비지정 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승성이 강하면서도 누구라도 우리 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했음. 과거와 달리 공동체 전승을 우선 배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61개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선정했는데, 전라북도 와 관련한 항목은 극히 적음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우선순위
아리랑, 김치, 고려인삼, 구들, 잡녀, 막거리, 장(장류), 종가문화, 천일염, 시나위, 향약정재	상위순위
연등회, 도깨비, 꺼메기(질그릇), 젓갈, 지게, 죽방렴, 풍수, 갯벌어로, 오일장, 추석, 정월대보름, 삼복, 장승과 솟대신앙, 어촌계, 상계, 사물놀이, 출생 및 육아의례, 전통혼례, 상장례, 제례, 그네타기, 윷놀이, 씨름, 거문고정악, 창극, 연례악, 메나리(동부민요), 전래동요, 아박무, 향발, 선유락, 당악정재, 가인전목단, 춘앵전, 이야기꾼, 서사민요, 전통향해술, 무속신화, 토정비결, 떡, 장고춤, 부채춤, 소고춤, 통소음악, 해금음악, 현선도, 수연장, 오양선, 보 관개기술, 사상체질의학	순위 없음

자료: 한국민속학회(2011),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작성 연구: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중심으로"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참여 연구자들의 지역별 분포와 무관하지 않음. 연구자는 7명으로, 서울 4명, 경북 1명, 전남 2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전남 연구자가 선정한 천일염, 돌살, 죽방렴, 갯벌어로, 무속신화 등과 서울 연구자가 선정한 메나리(동부민요), 창극, 거문고정악, 향약정재, 장고춤, 수연장, 오양선 등이 연구자 지역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줌

타 시·도,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려는 문화재청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처. 체계적인 조사·연구 진행

-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국가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청 계획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이 대표적임
 -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입각, 분류 목록을 작성하고, 상세목록화를 만들려고 함
- 강원도는 강릉단오제에서 경험했듯이, 학자, 공무원, 지역민이 새로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유네스코 심사기준도 이 항목(community identity)을 중요시함
- 또한,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세계적 유산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임. 최근에는 영광법성포단오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영광굴비와 함께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음

전라북도, 메카톤급 무형문화유산 있으나, 세계유산으로 만들려는 노력 부족, 체계적인 조사·연구 통해 국가목록 및 유네스코 등재 노력 필요

- 문화재청이 전북대학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온라인전수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약 3,500여 항목의 무형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실태조사가 상세조사로 이어져야 함. 유네스코 분류법에 따른 기초목록을 바탕으로 인벤토리(상세목록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함.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가목록 선정 과정에서 선정자들이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임
 - 유네스코 분류법에 따른 기초목록을 작성해놓지 않으면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대표목록에 포함되는 일이 힘들어지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역시 힘들어짐을 의미함
- 첫째, 집단전승실태 연구팀-전문가, 공무원, 공동체 구성원-의 가동이 절실함
 -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것은 뛰어난 개인기량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승하는 공동체 및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을 선호하고 있음
- 둘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 과정은 기존의 조사·연구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함
 - 새로운 지정체계는 기존 항목 분류와 완전히 다름. ① 구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예술, ③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에 속한 무형문화를 선정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기능을 보고 지정하는 것은 한 항목(②) 뿐임. 즉,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발굴이 필요함
- 셋째, 준비에 장기간이 필요함. 학자, 공무원, 무형문화 보유집단(마을, 개인)이 함께 발굴, 연구한 후, 학술적 검증절차를 거쳐서 국내외 관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준비기간은 적어도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봄

2) 무형문화유산 관련 시·도 역할분담 : 전북, 전승교육 및 산업 중심

전북은 전승·교육 및 산업 중심, 강원은 세계적 축제 중심 등

-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지자체 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기보다 지역별 역할분담을 부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에 지역별 역할분담, 지역별 특화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2013년 들어서며, 아·태무형유산센터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옮겨오기로 계획돼 있음.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정부차원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진행 중임
- 따라서 전북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코어 역할을 부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임.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국제네트워크의 허브이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및 활용·산업화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1〉국립무형유산원(왼쪽), 한국전통문화전당(가운데), 한지산업지원센터(오른쪽)

- 강원(강릉)은 강릉단오제가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한 것처럼, 무형문화축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함.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보다 발전시켜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무형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함
- 이와 관련해 ICCN세계무형문화축전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주 아·태무형문화축제를 전환할 필요 있음. 전북의 역할에 맞춰 산업 관련 행사 또는 무형문화유산의 정보, 전승·교육 관련 행사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임

〈표 7〉 무형문화유산 관련 축제 현황

구분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	전주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축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축제 개요	일시 : 2012.10.19~10.28 장소 : 강릉시 단오문화관~강릉임영관 등 도심일원 주제 : 무형문화와 가치, 도시에서 발견하다 주최 : 강릉시, ICCN 주관 :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 규모 : 23개국 29개팀 국내 32개팀	일시 : 2012.6.1~6.3 장소 : 전주한옥마을일원 주제 : 삶, 놀이 주최 : 전주시 주관 : 전주문화재단 규모 : 10개국 15개팀, 200여명	일시 : 2010.9.28~10.12 장소 : 부천영상문화단지 주제 : 전통을 딛고 미래를 발견하다 주최 : 부천시 주관 : 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 규모 : 세계각국 무형문화기능 보유인 600여명
프로 그램	전시	전시	전시
	공연	공연	공연
	체험 행사	부대 행사	체험 행사
	국제 회의		기타 행사
비고	2012년 첫 개최	2013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주관	신임시장 취임 이후 축제 폐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 있는 전북에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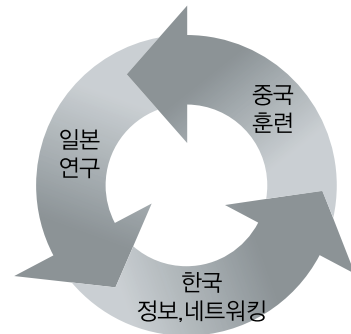
- **가칭** 무형문화유산법(안)은 무형문화유산 진흥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
 - 주요 사업은 전통공예품 제작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지원, 전통공예품 인증 및 판매 사업,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전시 등 전통공예품 은행 운영, 전통공연 브랜드화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새터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사업, 해외입양·해외이주 한민족에 대한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사업, 그 밖의 무형문화유산 진흥에 관한 사업 등임

- 진흥원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총괄조직인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국제기구인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공동활동이 필요함. 즉, 진흥원은 두 기관과 같은 지역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북에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전북이 타당함. 비용추계를 보면, 필요한 사무공간은 2,280㎡로 매년 임차료만으로 10억원 이상이 소요됨. 전북에 위치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전국적 활동 위해 서울(비용추계는 서울을 가정)에 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안동에 설립한 '국학진흥원'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역에 설치한다고 해서 전국적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3)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화 전략

(가칭)아시아·태평양 창조센터 건립, (가칭)아시아·태평양 전통공예산업 박람회 개최

-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를 계기로 전북을 무형문화유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네스코 가입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교류행사 및 공동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함
-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에 관해 한국은 정보·네트워킹, 중국은 훈련, 일본은 연구기능을 특화하여 각각 3개가 설치 운영 중임
- 아·태무형유산센터의 2013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국가별 현황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무형유산 정보화 기반조성 및 무형유산 기관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구축사업을 주된 업무로 추진할 예정임
-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정보화 기반조성, 무형유산 협력네트워크 구축, 무형유산진흥과 가시성제고, 아·태무형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전략적 목표로 삼음
-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들어서는 전북은 무형문화유산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첫째,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조산업의 중심으로서 '(가칭)아시아·태평양 창조센터' 건립을 제안함
- 아시아·태평양 창조센터는 광고·건축·미술품·공예·디자인·패션·영화·출판·소프트웨어·게임·음악·공연·방송 등의 창조산업에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R&D 기능을 담당함
- 둘째, '(가칭)아시아·태평양 전통공예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되,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유치한 한·중·일 도시 간 순회개최를 제안함. 이 사업은 카테고리 2급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센터를 가진 한·중·일 3국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북을 무형문화유산의 산업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효과가 있음
- 전통공예는 전통적 보존정책에서 현대적 활용방안 및 상품화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분야이자 현대적 활용이 가장 용이한 장르임
- 일본은 전통공예의 산업적 접근을 위해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974)하고 공예품을 인증·육성하고 있으며, 전통공예품의 유통을 위해 '전통공예센터' 운영
- 중국은 전통공예품과 기법보호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예품 국가 인증제도 운영
- 한국은 올해부터 전통공예품 인증제, 전통공예품 은행제, 한국전통공예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
- 아시아·태평양 전통공예연합회를 구성하고, 유네스코 공식박람회로 '아시아·태평양 전통공예산업 박람회'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아·태지역 전통공예가들과의 협업 전시회, 국내 전통공예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검증, 해외 공예 경향 파악, 해외 공예인과의 교류, 기업의 상품구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전통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K-스타일 디자인센터 건립

- 외국 것을 빠르게 베껴내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혁신이 필요함
 -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통문화의 현대적 디자인화 작업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



- 올해 실시될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및 무형문화유산진흥법의 개정에 맞춰 무형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
 -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에 대한 통제와 이익의 공유,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무단공개 금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대중의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어 보호될 가능성이 적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구 의장권) 등의 경우 새로운 창의적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 다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이 다른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의 특허권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방식에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스타일 디자인'이 필요하며, 이를 창조하기 위한 'K-스타일 디자인센터'가 시급함. 정부차원에서 전통공예의 디자인혁신과 전통이미지의 첨단상품과의 연계를 위한 종합적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도록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베이징시 디자인 예산은 5만위안(약9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가 디자인 예산(430억원)의 2배 이상
- 'K-스타일 디자인센터'는 전통디자인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환경변화에 대한 현대적 디자인의 개발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전통상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조직임. 문화재청이 구상 중인 '한국전통공예센터'를 유치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전통공예공방의 열악한 마케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전통공예센터를 건립하고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증대, 공예품에 대한 유통거점형성,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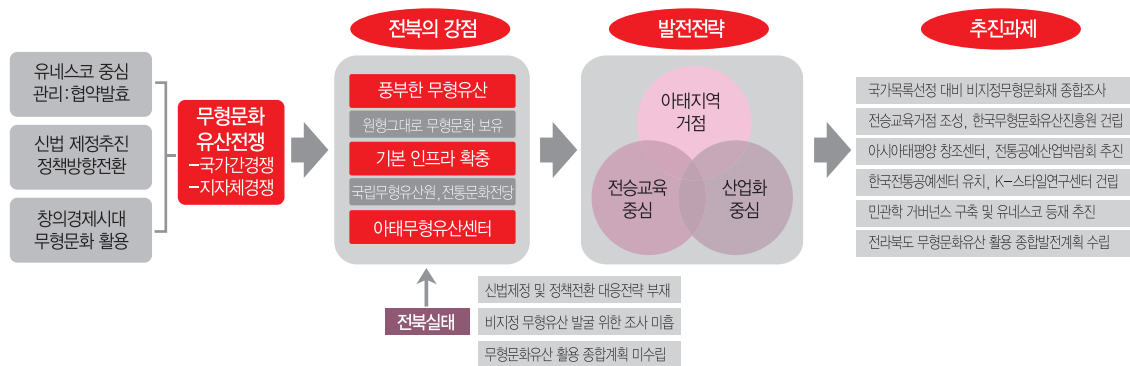
4) 거버넌스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의 종합계획 수립

민·관·학 공동연구체계 구축,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종합 조사·연구

-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관련 민(무형문화유산 공동체)·관(지자체)·학(대학 연구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라남도 대학연구팀과 지자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조체계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들은 낙안읍성, 광주김치, 법성포 단오제, 운선도의 어부사시가 등을 몇 년에 걸친 연구 및 검증과정을 통과해서 중요문화재지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 등의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음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기준 및 관리체계가 달라지는 우리나라 법·정책에 맞춰 전라북도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학술연구용역을 전문조사팀에 의뢰), 국가대표목록 선정 및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해야 함

학술연구용역 통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 국립무형유산원(2013년 개관)과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전북에 호재이나,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를 활용, 전북을 무형문화유산의 아시아·태평양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국립무형유산원 개관을 계기로 전북을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전승·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내 종합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는 아·태 무형유산센터, 아카이브센터, 복합전승센터, 교육연수센터, 공연센터, 기획연구센터, 시민체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임
-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과 연계, 아시아·태평양 거점 및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수도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종합발전계획'(학술연구용역)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썈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